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지역개발연구 임승현 연구위원
(063-280-7151, 010-3671-7634)
- **담 당**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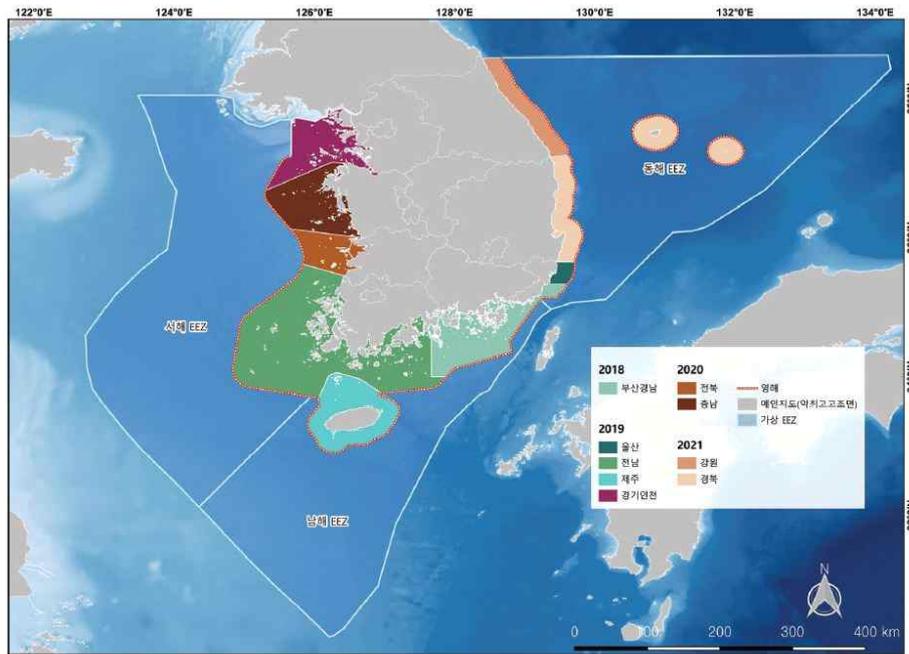
보도시점 : 2019년 6월 19일(수)부터

해양공간계획체계 도입에 따른 전북의 대응

**전남·전북 해양공간계획의 동시 승인·고시 추진,
시·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,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**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해양공간계획법’)」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로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·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임승현 박사는 해양공간계획(Marine Spatial Planning : MSP)이 해양에 대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 국제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해양 활동을 지양하고 ‘先 계획 後 이용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모델이라고 설명했다.
- 금번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(2019-2028)(안)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. 또한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(EEZ 포함)에 대해서 시도별로 2021년까지 수립·고시할 예정이다.

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로드맵(출처 : 공간기본계획안)



-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될 예정으로,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·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.
- 따라서 전라북도가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하여 첫째, 전남·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·고시 추진, 둘째,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도내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 추진 등 대응이 필요하다.
- 임 박사는 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라북도 과제로서 첫째, 시·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, 둘째,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, 셋째,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하였다.
-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해양의 이용 및 개발 수요와 맞물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.